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순 서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 1

1. 국정기획위 출범 배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1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 2

Ⅱ.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 7

1. 문재인정부 출범 의의 ····· 7

2.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 10

Ⅲ. 목표·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 16

1. 국정과제 선정 과정 및 체계 ····· 16

2. 목표 1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23

3. 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42

4. 목표 3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73

5. 목표 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110

6. 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124

순 서

Ⅳ. 4대 복합·혁신과제 ····· 143

1.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144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150
3.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154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158

Ⅴ. 지역공약 이행방안 ····· 162

Ⅵ.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 173

Ⅶ. 입법 추진계획 ····· 183

Ⅷ. 후속조치 계획 ····· 186

1. 국정과제 및 복합·혁신과제 추진체계 ····· 186
2. 국정과제 관리방안 ····· 187
3. 국정과제 공유·확산 ····· 188

첨부. 국민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 **189**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기획위 출범 배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문재인정부 출범 시의 여건

○ 문재인정부는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출범

- 대내적으로는 **무너진 국가·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하는 임무 부여

- 대외적으로는 **당당한 협력외교 체제**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한미동맹**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어렵고도 복합적인 환경에 직면

○ 부여된 임무와 환경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

- 정부 출범 이전에 기존 정부의 정책을 평가·인수하여 **국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 미확보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출범과 임무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처한 이중적 압박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출범

○ **정부를 구성하고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상황을 보완**하여 국가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을 준비

-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계획, 국민의 정책 제안을 종합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과제를 수립**, 대통령에게 적절히 자문하고 공유·확산하는 임무

○ 효율적·통합적 임무 수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인수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 기구**로 구성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시기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국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는 동시에

- 문재인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대한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내외의 상황, 국가발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 수립**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필요성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지침**

○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지도**

○ 정책 집행 단계에서 목표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수립되는 정책들이 문재인정부의 지향에 부합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수단**

□ **국정운영의 설계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설계도**

○ 주권자인 국민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인 국회·행정부, 그리고 기업과 단체 등 각 주체에 국정운영 계획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체 운영의 예측 가능성 증대**

○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기반을 확대**

□ **국정운영의 평가기준**

○ 부문별 정책들이 국가목표와 국정목표에 따라 일관되고 합리적·효율적·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 전환 필요시 **변화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고 평가기준의 전환을 돕는 시방서**

- 국정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의 정도와 각 정책들의 연계 수준에 따른 정책 수정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반

◈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직면한 이중적 요구

○ 9년 만에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성**과 함께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로서의 **신속성**이 필요

○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의 정부로서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적 상황의 시급성·중대성으로 인해 **전문성과 체계성**도 필요

□ 작지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신중성과 신속성의 조화를 위해 **간소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였고, 분과위와 TFT 운영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활동**

-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총 6개 분과**를 구성, 기획부터 수행까지 **효율적·전문적·체계적 활동**을 진행
- △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 국정계획 5개년 계획 수립 △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 지역공약 검토의 **총 5개 TFT**를 **구성·운용**

○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해 △ 기관보고 △ 분과 토론 △ 분과 간 토론을 동시에 진행

-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총 **290여 회**에 걸쳐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여 회의 분과별 회의**, **20여 회의 분과 간 회의**를 개최
- 각 분과 자문위원 과 전문위원간 비공식적 토론도 상시적으로 진행
- **국정과제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도봉고), 비정규직(민노총·한노총), 경제민주화(대한상의) 등의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의견 청취

□ **국민과의 소통 및 당-정-민간 전문성의 조화**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를 두고 **총 16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검토하여 국정계획에 반영**

○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 **자문위원**은 전문성이 검증된 **국회의원**과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

- 공약 수립을 담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공약과 정부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정부정책과 실무에 밝은 **각 부처 국장급**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위촉

○ 문재인정부를 구성하는 3대 축인 여당,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모은 협업체계 구축

정부기관 업무보고	⇒	분과별 회의	⇒	분과 간 회의	⇒	비전 수립 목표 설정 과제 선정	⇒	보고서 발간
85개 기관 290여 회		210여 회		20여 회				

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특징

□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자 새롭게 집권한 민주정부로서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

○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향후 문재인정부의 세부 정책 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의 기준을 마련

□ **새로운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추어 각 부문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

○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각 부문별 과제, 시기별·연도별 달성목표, 재원, 입법계획, 주관부처 등 추진주체까지 명시하여 **체계성·실행성을 조화**

○ 추상적인 개념과 목표, 중범위의 국정과제만을 제시했던 이전 정부들의 국정운영 계획에 비해 **구체성과 실행성을 강화**

□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

○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

- **정부와 국민의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국민참여형 국정계획 수립** 시도

○ 청와대를 포함한 범정부부처, 여당,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

□ **정부와 집권당에 국민을 향한 약속과 책임 부여**

○ 국민참여 속에 당·정·청이 협력하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을 부여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 책임의 원칙**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

Ⅱ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1 문재인정부 출범 의의

1 새로운 시대 규정 : 국민의 시대

□ **국민의 시대 개막**

○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 **나라의 주인**이자 △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

○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며,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시대**의 **개막**

- 국민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시대**

※ 민주화시대 30년의 정부와 시대 규정 변화

문민 정부	⇒	국민의 정부	⇒	참여 정부	⇒	국민성공 시대	⇒	국민행복 시대	⇒	**국민주권 시대**

□ **새로운 국민의 등장 :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

○ 근대적 국민은 집합적 의미의 국민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강조, **주권자 국민**은 대표되는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의 국민주권** 강조

○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

□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 1987년 이후 열린 민주화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제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

○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정부·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회복

○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권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

구 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국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 주권자 민주주의 구성요소

○ 주권자 민주주의 구성요소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
② 직접 민주주의 →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
③ 일상의 민주주의 →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
④ 과정의 민주주의 →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⑤ 풀뿌리 민주주의 →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2 국민의 시대와 문재인정부의 과제

□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

○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justice)로서,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

○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국정운영의 방법론이자 지향점이며, 이러한 국가 개혁의 양대 과제는 **국민의 시대를 열고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일구는 것

□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특권 정치를 철폐하여, **국민의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

○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협치와 합의의 정치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

□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

○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 사회불평등의 증대, 불공정 경제구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

○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

2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1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왜 '국민의 나라'인가

○ '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진 엘리트 중심 정치의 탈피를 요구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

○ 국민의 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

①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켜야 하는 목표

②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며,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 모색

□ 왜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낸 계기**

○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

○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

○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

-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가치**

2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

○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

○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의 모습을 실천

○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 모색

◈ **'국민이 주인인 정부' 4대 국정전략**
①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③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

○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

○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

-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필요

○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

○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국정전략**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

○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3대 국정전략**
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②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③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

○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

○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국정전략**

①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②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③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Ⅲ 목표·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1 국정과제 선정 과정 및 체계

1 국정과제 선정 과정

□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 **공약**의 **내용**, **정책 포괄 범위**·**유사성**, **실천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정과제 단위로 재구성

-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 공약으로 재분류**하고 각 세부 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방안 마련**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정책건의 중 공약과 관련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

○ 공약 외에 시급한 **민생과제**, 각종 **제도개선 필요 사항**, 기타 **국정현안 사항**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도 **국정과제에 추가**

□ 종합된 국정과제안은 국정기획위 검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가능성**,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

□ 국정목표, 국정전략 등을 고려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참고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및 국정과제 반영 현황

□ (구 성) **국민인수위원**(일반국민), **소통위원**(홍서윤 전 KBS 앵커,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 원장), 간사위원(사회혁신수석), 지원기획단

* 5.16,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 설치 의결

□ (제안현황) 7.12일 현재 **총 164,912건 접수, 정책제안 154,878건**

○ 국민들은 공약(12대 약속) 중 **민생·복지·교육**(38.6%), **일자리**(17.0%), **부정·부패·청산**(12.7%) 순으로 제안 제출

○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학교·교사·기업·비정규직** 등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

□ (국민제안 반영) 국민인수위·부처 등의 검토를 거쳐 국정기획위에 제출된 제안 101건 집중 검토 → **총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

* (사례) 택배 등 배달료 현실화 → '화물종사자 보호 강화'에 반영
블로그·SNS마켓 수익에 과세 → '과세형평 제고'에 반영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반영

○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2건***

* (사례) 쇠고기 등급 보완, 장기보관 양곡 공업용 전분 공급 등

□ (국민인수위 향후계획)

○ 광화문1번가를 통한 제안창구 운영 : ~7.12

○ 6.16~7.12 국민제안에 대한 부처검토 및 정책화 : ~8.11

○ 국민인수위 운영결과에 대한 대국민보고대회 : 8월 말

* 제안자와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

2 국정과제 체계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

○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 10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

○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행자부・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미래부・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행자부・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3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

□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문재인정부 5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행목표·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방안**을 **마련**

’17년 5월~’18년	⇒	’19년~’20년	⇒	’21년~’22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		**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

① 혁신기(’17년 5월 ~ ’18년) :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

- 적폐 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개헌과 정치개혁**도 추진
- 시급한 민생과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본사업 추진기반 마련**

  * 하위법령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조기 이행, 국회 협의로 핵심입법 완료

② 도약기(’19년 ~ ’20년) : 국민 지지를 통한 과제별 체감성과 본격 창출

- **각계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 본격 창출***

  * 광역 자치경찰 전면 실시, 5G 조기 상용화,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진 대응체제 완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연대보증제 폐지 등

-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와 소통**을 통해 **국민지지 확보**
-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국정운영동력 강화

  * 북핵·남북관계, 글로벌 경제 여건, 안전사고, 공직 비리 등

③ 안정기(’21년 ~ ’22년 5월) : 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

-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 완료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유와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 구축**

2 국정목표 1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주요내용**

○ ’16년 한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

- 문재인정부는 그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

○ 최순실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 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 복원**

-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 반부패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여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체계** 강화

○ **과거사 진실 규명**과 보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실현되지 못한 사회정의를 세우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

○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 **국정과제**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 과제목표

○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 주요내용

○ (국정농단 조사)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17년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

□ 기대효과

○ 국정농단세력의 인사·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 복원

○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법무부)

□ 과제목표

○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

□ 주요내용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운영, **'18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18년부터 국민소송제도 도입・시행**

- '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 추진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18년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확대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17년에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마련, 민관협의체 정책 모니터링 실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의 평가('19년)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공정성 강화

□ 기대효과

○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 도약('16년 52위)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 과제목표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 (제주4.3 완전 해결)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착수

- **'17년에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 (과거사재단 설립) 과거사별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검토, 위령사업 및 연구·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 '19년에 재단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민간인 집단희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과제목표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유 보장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 '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 (방송 제작·편성)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 '17년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 마련, **'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명예회복 지원**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18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 '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18년 공적규제 축소 → '19년 자율규제 기반조성 → '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

□ 기대효과

○ '22년에 언론자유지수 30위권으로 신장('16년 70위)

○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

전략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주요내용

○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국가 운영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국민과의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

- **국민의 알권리, 참여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치제도를 개혁**하여 소통에 기반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전략

○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하는 등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추진

- 또한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개헌, 국민주권시대와 지역분권을 지향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

◈ 국정과제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 과제목표

○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인재군을 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수립**

○ (주요인사 일정 공개)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 (인사시스템 투명화) **'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인물정보 관리 강화

-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 상시 집중관리

□ 기대효과

○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 구현

○ 주요 인사의 일정을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한 국정운영 확립

○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지원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 행자부 • 인권위)

□ 과제목표

○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인권 보호) **'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조직 등 확대**

-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대효과

○ 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

○ 기부·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과제목표

○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국민주권적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개막

○ 개헌에 따른 입법조치로 정치개혁의 발전과 진전

전략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주요내용

○ 지난 정부는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부정부패의 방관자 등으로 비판받으면서 '16년 정부신뢰도는 OECD 평균인 42%의 절반을 조금 넘는 24%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신뢰 위기와 불통의 비난**에 직면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정부혁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투명한 민주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시급한 책무

○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지능형 혁신정부**',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거듭나는 공직사회를 구현

-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민을 보호하는 조국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외거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 추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조직적 체계도 강화

○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공동체 구현**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고 이 분들을 기리는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의 바탕 조성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9 적재적소·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 과제목표

○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 주요내용

○ (혁신적인 열린 정부) **'17년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18년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책임성 제고

*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18년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 **제정, '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 확산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정책박람회 정례화·지방확산 등 추진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행정 구현) '19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

-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정부신뢰도 OECD 평균 수준 상향 및 사회혁신 국제선도국가로 도약

* 정부신뢰도('17.7) : 한국 24%, OECD평균 42% / 사회혁신지수(Economist, '16) : 12위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 과제목표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강화,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성·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등 추진

□ 주요내용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

- '18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지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 (깨끗한 공직사회) **'18년까지 재산 공개·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 대폭 개선

- '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 도입

○ (차별 없는 균형인사) **'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 '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혁신적 공직문화) **'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 단계적 확대**,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대상 부처·계급 확대

- **'18년까지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 (공직사회 사기 제고) **'18년까지 육아시간·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일선 현장근무자 위험직무 재해보상 강화 및 후생복지 개선

□ 기대효과

○ 공정·투명·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 **과제목표**

○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재외국민 보호)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역사·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 (재외공관) **'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워킹 홀리데이 협정 다변화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기대효과**

○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대폭 강화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재외국민 편익 증진 및 신분 보호 강화, 청년 해외진출 지원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 과제목표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주요내용

○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 보장

- 보상금·수당 지속 인상 검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19년) 등 추진
-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독립정신 확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구현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공상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유해 발굴 사업 추진

○ (국제보훈 사업) '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개최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구현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과제목표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

○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안전·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 **'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7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 (열린 공공기관) **'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

○ (평가체계 개선) **'17년**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 '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 (지방 공공기관 혁신) '17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주요내용

○ 한국의 일부 권력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부패한 권력자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를 방지하지 못한 한계** 노출

-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명

○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왔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

- 권한의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빈번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여 진정한 인권경찰**로 변화를 유도

○ 투명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비판받아온 **감사원과 국세청** 등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개혁**

◈ 국정과제

⑬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⑭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⑮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 · 경찰청 · 감사원 · 국정원)

□ **과제목표**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 (검찰인사 중립성 · 독립성 확보)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 (광역단위 자치경찰)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 · 개정**하고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19년 전면 실시**

○ (경찰개혁) **'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

- '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 **'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

○ (국정원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기대효과**

○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 정립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 과제 목표

○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

□ 주요 내용

○ (공동체 예방치안) '17년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

* △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

○ (치안인프라 확충) '17년부터 **치안 R&D 활성화**(육안 미확인 법광원,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등)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국과수 미설치 지역**(제주 등 11곳) **합동 감정체계 구축**, **의무경찰 단계적(5년)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 근속승진 단축 등 경찰 처우 개선, 교정시설 과밀화 단계적 해소

□ 기대효과

○ 치안R&D,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 과제목표

○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형평 과세방안 마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

□ 주요내용

○ (특별기구 설치) **'17년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 설치, **'18년에 개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국회 보고**

○ (과세형평 제고) **'17년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
- 대기업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
-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추진

○ (납세자 중심 서비스) **'17년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

3 국정목표 2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주요내용

○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 필요

-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

○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

- 이를 위해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 안정된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

- 또한 미래와 유사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

◈ 국정과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과제목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일자리상황판 설치·운영**으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관리

-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담양 등)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 과제목표

○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 과제목표

○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매년 정원의 3% → 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17년 5천명, '18년~'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지급**('17년~'18년)

-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17년)으로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재취업 원활화

○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 과제목표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기대효과

○ 실직·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구축

○ 전 국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 과제목표

○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산업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 주요내용

○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제도개선·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 '17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

-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기대효과

○ 서비스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 과제목표

○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

□ 주요내용

○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이자부담 완화)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추진

○ (대출채권 관리 강화) **'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19년)

□ 기대효과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권익 보호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과제목표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주요내용

○ (자유로운 진입환경) **'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

-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

○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

○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 마련

□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

○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주요내용

○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

- 문재인정부는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

○ 우월한 자금력이나 위치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질서를 타파**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

-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세한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

○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정과제

㉓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㉕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㉖ 사회적경제 활성화
㉗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과제목표

○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을지로위원회)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 **'17년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

○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7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 정비

-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형벌 :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 20억 → 폐지)

□ 기대효과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 과제목표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 주요내용

○ (총수 일가 전횡 방지) **'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사면권 심사 강화

○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17년~'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 (사익편취 근절) **'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 (금산분리) **'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

□ 기대효과

○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 과제목표

○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주요내용

○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추진
-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 조직·인력 확대 검토

○ (지자체 협업) **'18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18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추진

□ 기대효과

○ 신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 과제목표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 주요내용

○ (법·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17년부터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 과제목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7년 중 특별법 제정)

-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단계별 확대*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7년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 기대효과

○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3차 이상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
('16년 중기중앙회 조사 - 1차 협력업체 90.4%, 2차 85.6%, 3차 이상 82.4%)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주요내용

○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주는 것**이 중요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은 어떤 정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략이며, 특히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로서는 **정부의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강화와 함께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협업화·경영혁신 등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생존율 제고 방안도 추진

○ 국민의 재산형성·노후대비 지원 및 **지속적·안정적 서민 금융지원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및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 생활비 절감**

◈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 과제목표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

○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특화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17년 105만명)

○ (골목상권) **'17년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수익성·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5만명 양성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 **과제목표**

○ 국민의 재산형성·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

○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

□ **주요내용**

○ (ISA 실효성 제고) **'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 (장발장 은행)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토

□ **기대효과**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 과제목표

○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안전·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

○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17년부터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국민생활 불편·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창업·입지 등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 해소 추진

○ (생명·안전·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17년부터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및 규제 도입 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과태료·과징금의 규제심사 대상 제외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17년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 및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민주성 제고) **'17년부터 환경·소비자·여성 등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회의록 상세 작성·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 기대효과

○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 도모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토부·미래부)

□ 과제목표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 주요내용

○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교통청 업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 (광역교통청 신설)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 (광역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 (광역급행철도)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추진**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 기대효과

○ 수도권 지역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 확보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과제목표**

○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 **주요내용**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년 표준운임 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21년부터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

○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

○ (SOC 안전 강화) **'17년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 수립**,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노후도로 개선

○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

□ **기대효과**

○ 건설분야 임금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 '22년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

-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

○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력을 확보·실용화하고,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초지능·초연결 사회의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금융·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 기대효과

○ ICT·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

○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미래부·국토부·복지부)

□ 과제목표

○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친환경·스마트카)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 (제약·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 (드론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Standards on Demand)

□ 기대효과

○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 과제목표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 주요내용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 (행정 효율화)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소통 강화) 정부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개인정보 및 보안과제를 제외한 사업·인력·예산·과제·성과 등 모든 정보

○ (해외교류 확대) 재외 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인류 공동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사회 국가 지위 향상

□ 기대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가,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 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을 보장

○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 정립

○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 기대효과

○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16년 22.6%)

○ 청년·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산업부)

□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

○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

□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현재 '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

○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 **'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및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완료

○ (에너지효율)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

- **'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과제목표

○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융복합화·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지원

□ 주요내용

○ (제조업 부흥) **'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

○ (주력산업 재편)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

○ (수출구조 혁신) **'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 (유턴기업 유치)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 기대효과

○ 매년 5천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

○ '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 창출

전략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주요내용

○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 필요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하여 소득 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전략

○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왔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인력난을 완화**하고,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 하나면 창업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만드는 데 충분한 환경** 구축

◈ 국정과제

㊴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㊵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㊶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 과제목표

○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 주요내용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추진

○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 기대효과

○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 과제목표

○ 중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달성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R&D)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기간 확대 등

○ (중소기업 자금조달)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지원센터 확충,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 (성장사다리 구축)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

- 정부 법령·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개선

□ 기대효과

○ '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 11만개 돌파('16년 9.2만개 → '22년 11만개)

○ '22년까지 R&D 지원확대로 6.5만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천개 일자리 창출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 과제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양성 등 청년·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 주요내용

○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우수 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

□ 기대효과

○ '16년 2.8%(26만명)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2년 2.3%(21만명)까지 완화

○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4 국정목표 3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주요내용**

○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사회·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

○ 문재인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

-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액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
-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
-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여,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 정신 실현

◈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과제목표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 과제목표

○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대상 확대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 기대효과

○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 과제목표

○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 주요내용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 기대효과

○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15년 63.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 '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 과제목표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 주요내용

○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 **'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 (의료격차 해소)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 '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기대효과

○ '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15년 30.5% → '21년 25%)

○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 과제목표

○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기대효과

○ ’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16년 6.3%)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과제목표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5만명) 등

□ 기대효과

○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주거안정 강화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주요내용

○ ’17년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 상태에 돌입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인구절벽부터 국가 공동체의 점진적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역 없이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할 시점

○ 문재인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한국 공동체 소멸을 막는 일의 시작**이라고 판단

- 국공립유치원 등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등 유아기 출발선부터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

○ 한국 사회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재생산을 위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기조 위에서 진로맞춤형 교육,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 등 **공교육을 혁신**

-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국가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전문대 지원 확대, 고졸자 취업 확대 등과 함께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도 추진

◈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 과제목표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보육·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 기대효과

○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 과제목표

○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복지부)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조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

○ (고교 무상교육)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 기대효과

○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 주요내용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국가교육회의**('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

○ (기초학력 보장) **'17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 (혁신학교 등 확대) **'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학교 확산,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공모제 확대**('18년),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18년)

○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18년~),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추진

*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18년~)

-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대입정책 예고제(3년 6개월 전) 법제화('17년)

□ 기대효과

○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 과제목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21학년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지역인재선발 의무화(30% 원칙)
** 취약계층 선발 비율 : (현) 5% 이상 → (개선) 7% 이상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

-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관리('17년~)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

○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 과제목표

○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

○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주요내용

○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기대효과

○ 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 과제목표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지원기능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통합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 확대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 (전담공무원 배치)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 기대효과

○ 학교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퇴소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지식정보·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운영('18년~)

- STEAM 연구·선도학교 운영 확대

○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 (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

○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17년 초등 3학년~5학년→ '20년 초등 전 학년)

□ 기대효과

○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략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주요내용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이나,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

○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

- 효과적인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맞추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

- 국민의 안전한 생업을 방해하는 주변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양주권과 해양영토를 수호

○ 국가와 세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

-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

-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 과제목표

○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안전복지)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명시**

- **'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 (교통 안전)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 '17년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 (안전위험요소 제거)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 (지진 안전)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 '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16년 50초)

○ (화재 안전)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

-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 (스마트 기상정보) '17년부터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19년) 및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 기대효과

○ OECD 중위권 수준 교통안전* 달성, '15년 대비 화재 피해 17% 감축

* '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14년 1.1명) 이하 달성(한국 '15년 1.9명)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 과제목표

○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

□ 주요내용

○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 (소방) **'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 (해경) **'17년에 해경청 독립 및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

○ (재난 예·경보)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 (재난조사·치료) **'18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18년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로 사회적 논란 최소화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 • 식약처)

□ 과제목표

○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 주요내용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18년)

○ (생활주변 위해·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

○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 기대효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 주요내용

○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17년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 (발전·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동남·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 (한중·동북아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

□ 기대효과

○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16년 26)으로 개선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 과제목표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 주요내용

○ (국토보전·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18년)

○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 추진

○ (안전한 물환경)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

- **물관리 일원화**('17년),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19년)

- '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

○ '21년까지 물 공급 안전율(지자체 중 물부족 제외한 비율) 87% 달성('13년 62%)

○ '21년까지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 60%, 동물 등록 200만 마리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 과제목표

○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 주요내용

○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

○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18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19년)

○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 기대효과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 **과제목표**

○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 **주요내용**

○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18년~)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

-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 **기대효과**

○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과제목표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

□ 주요내용

○ (해양영토 수호) **'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

- '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와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22개소 설치

○ (불법조업 근절) **'17년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 설치, '22년 육·해·공 감시망 구축과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 (섬 관리 강화)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하여 생필품 운송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 (해양안전 강화) **'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시행, '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및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

○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 '19년 연안 100km까지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1년 시스템 고도화 및 '22년 전국 운영

□ 기대효과

○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립하고 노후여객선 비율을 15%('17년 29%) 까지 감축

전략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주요내용

○ 서로의 다름을 차이가 아닌 우열로 인식하는 **차별**은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이 아닌, 소속된 집단 혹은 성별로 판단하여 개인과 집단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불평등으로 직결**

- 이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높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

○ 정의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전제하는 문재인정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

- 사람을 사회경제의 중심에 놓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인권을 강화하고 노동의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을 추진

-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

○ 사회적 차별 해소의 핵심은 **다름의 존중과 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 과제목표

○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 주요내용

○ (노동존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18년)

○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7년에 2대 지침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

-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추진

○ (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추진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체불·부당해고 구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18년)

○ (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기대효과

○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 침해 행태 근절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 과제목표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임금격차 해소)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 과제목표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

-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 (취약가족 지원) **취약·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 기대효과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 완화

○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및 사회통합 제고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과제목표

○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

○ (여성 대표성 제고) **'17년부터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이행**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17년~)

○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운영

- '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연구사업 체계화

□ 기대효과

○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 및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 마련

○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 제고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

전략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주요내용

○ 현대 사회는 **시민이 문화·예술·스포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동시에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이 중요한 삶의 질 지표**

-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 지위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박하고 관광 등도 70년대의 수출 우선 시각처럼 외국인 관광 유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와 예술**, 국민의 휴식 제고를 위한 관광 및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서의 **관광 진흥을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

-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완화

-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 예술인의 창작의 자유 보장과 창작 여건 조성, 문화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로 우리 사회의 **창의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 부가가치를 극대화**

- **문화행정체계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문화 분야의 재정기반 확충과 매개인력 일자리 확대로 문화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과 관광 산업의 진흥을 적극 지원

- 한류 및 문화교류 인프라를 확대하여 한국속에 세계인을 품도록 하며, 체육과 문화의 남북-국제 교류를 통해 문화의 평화기능을 확산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 과제목표

○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 주요내용

○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 (문화재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 기대효과

○ '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16년 78.3%)

○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16년 2,595개) 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 과제목표

○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

○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 도모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 과제목표

○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공정한 제작·유통환경)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 (영화) 제정 (애니메이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정 (만화·웹툰·2차적 저작물) 계약서 보완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계약서 제정 (방송)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확대***

* (콘텐츠 스테이션, '18년 청계천) 장르융합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홍릉시연장, '17년 홍릉) 실험적 융복합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 멀티유즈랩, '17년 판교) 원천소스 IP 활용 협업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VR 위주에서 타기술 기반 확대

○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쌍방향 문화교류 및 착한 한류 실현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 확대

- **'22년까지** 현재 6천만명 **한류팬**을 **1억명**으로 확대, '22년까지 세종학당 지속 확대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토대 마련

○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 과제목표

○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미디어복지) **'17년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22년까지 1백만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 '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 (지역방송 활성화) **'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 (미디어산업 성장) **'17년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1인미디어·중소콘텐츠제작자 및 UHD·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17년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8년에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 '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기대효과

○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 보장

○ 방송시장 균형발전 및 투자 확대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 제고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 과제목표

○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

□ 주요내용

○ (1,800시간대 노동시간) **'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휴식 있는 삶 보장)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 (육아·돌봄 지원 확대)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 기대효과

○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15년 근로시간 : 한국 2,071, 멕시코 2,346, 일본 1,734, OECD 평균 1,691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 과제목표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 주요내용

○ (생활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 제고**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

-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대회 운영 점검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 **'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22년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홍보

□ 기대효과

○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 '22년 64.5% 달성('16년 59.5%)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제고 및 국민통합

○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 과제목표

○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

□ 주요내용

○ (관광여가 사회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 지속

-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부터 적용)

○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컬' 관광지 육성

○ (외래관광 다변화) **'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 기대효과

○ '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 여건 신장

○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

5 국정목표 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주요내용**

○ 개인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

- 굳게 뿌리내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한국 전체를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낼 원동력이며 그 핵심은 자치분권

○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

-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강화**

◈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 과제목표

○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 (자치분권 기반 확보) **'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18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 4대 자치권 보장,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제고

○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확대

○ (마을자치 활성화) '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 기대효과

○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기재부)

□ 과제목표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 기대효과

○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확보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 과제목표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

□ 주요내용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31 확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 마련**

- 발행체제 연구·의견수렴('18년)을 통해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19년~)

○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년)

○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 (현장과의 소통·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 기대효과

○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

○ 중장기적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 시스템 구축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

□ 과제목표

○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

□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자부·미래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 '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

□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 실현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주요내용

○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노후주거지 및 생활 여건 개선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

○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세종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를 활성화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으로 선정,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

-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국내 조선·해운의 재건**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등 조선·해운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핵심 산업을 재건

◈ 국정과제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자부)

□ 과제목표

○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 강화

○ (세종시 육성)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추진

○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 (산업단지 혁신)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기대효과

○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 구축

○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력 넘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 과제목표

○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요내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 '17년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선정·지원**

○ (지역역량 강화)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 주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컨설팅** 등 **지원**

○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17년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및 '18년부터 본격 공급

○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기대효과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과제목표

○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한국해운 재건) **'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

- '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 제고

○ (해운·조선 상생협력) **'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0척 건조**

- '17년부터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 '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

○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 (물류망 확충) **'17년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및 **'19년 완공**, '17년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

□ 기대효과

○ '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16년 29조원) 달성,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16년 47만TEU) 달성으로 해운강국 위상 회복

○ '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 건조 등을 통해 해운-조선 상생구조 확립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주요내용

○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인식

- 시장 개방 확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

- 해양과 연안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며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 개선**

-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

◈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2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 주요내용

○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 추진
-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 **'22년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기대효과

○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 과제목표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 주요내용

○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보급

□ 기대효과

○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 주요내용

○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 과제목표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우리 바다 되살리기) **'18년 휴어제, '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 '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하여 '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 구축

○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

- '17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

○ (안전한 수산물 공급) **'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7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2년 180개소 등록

- 산지거점 유통센터 6개소, 소비지물류센터 2개소 건립 등 유통구조 혁신

○ (해양공간 통합관리) '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18년 남해안부터 '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

- '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 완료

□ 기대효과

○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

○ 해양공간(44만㎢)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6 국정목표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주요내용

○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

○ 문재인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

-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여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
-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

○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 국정과제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 과제목표

○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

-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

□ 기대효과

○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대응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 과제목표

○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계획 발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추진

□ 주요내용

○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조기 전작권 전환**

-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 보완·발전
-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 합의
-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 발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군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 한미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
-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
- 한미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

□ 기대효과

○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 과제목표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추진

○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 (군 사법 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 기대효과

○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호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 과제목표

○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 처벌 관련 법령 보완 및 비리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 강화

○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R&D 기획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 구축

- 국방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민·군융합 촉진 및 방위산업 육성

○ (국방R&D 제도 개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성과기반 군수 확대)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청렴한 업무환경 정착으로 국민신뢰 회복

○ 미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과제목표

○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

-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 (병역 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 강화

○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

□ 기대효과

○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기 앙양,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정한 병역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 면탈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보

전략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주요내용

○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안보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

○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

○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하여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 통일을 도모

- 이산가족 등 남북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

○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시행

◈ 국정과제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 과제목표

○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 (남북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 기대효과

○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 과제목표

○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

□ 주요내용

○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체육·군사·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 남북회담 체계화·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 기대효과

○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 및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발전

○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이행의 제도화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

□ 주요내용

○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

○ (인도 지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의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상봉정례화·교류 제도화**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

○ (탈북민 정착 지원) 지원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추진,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 활성화 노력

□ 기대효과

○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 과제목표

○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

○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간·지자체 자율성 확대

○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

□ 주요내용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참가 지원 등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 (거버넌스 구축)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 추진

○ (제도 개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 강화

□ 기대효과

○ 교류협력 재개·활성화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기여

○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접근성 강화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 과제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소통·참여, 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통일국민협약) **국회 협의**·**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모색 병행

○ (통일센터) '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수행

○ (차세대 통일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 강화

○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 기대효과

○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 확대

○ 통일 논의 활성화 및 미래세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과제목표

○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주요내용

○ (완전한 핵폐기) **'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 (비핵화 여건 조성)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룸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

○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 토대 마련

전략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주요내용

○ 국제사회에 깊숙이 인입된 국제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

-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

○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 체계 구축** 필요

- 이를 기반으로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추진** 등을 통해 국익을 증진

○ 한국에 동북아 외교는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 주도의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미동맹,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국익지향적으로 진행 필요

-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타파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

◈ 국정과제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 과제목표

○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

-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 외교 체계** 확립

○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인권·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추진

-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 도모

□ 기대효과

○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의 참여·소통 확대, 외교 역량 확충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 도출

○ 우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 과제목표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 간 동맹, 한·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일관계, 한·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

□ 주요내용

○ (한·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

- 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미 간 현안 합리적 해결

○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 한·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 (한·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과는 분리 대응
-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 (한·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 정상교류를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 기대효과

○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안정·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 과제목표

○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

○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

□ 주요내용

○ (동북아 평화협력) **역내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 및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 제도화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해 정부 간 협의회 정례화·제도화 모색
-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 추진
- MIKTA 지속 추진·강화 및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시도**

○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 수준)
-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 (신북방정책 구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 기대효과

○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평화·번영 공간 확대

○ 한반도·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 과제목표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 주요내용

○ (경제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 과제목표

○ 대미·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

□ 주요내용

○ (한미 경제협력) **한미 FTA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투자 발전**

-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 대비

○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력채널 재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 통상·산업·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

- RCEP* 및 한중일 FTA 적극 참여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역할 수행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ASEAN+한·중·일·호·뉴·인 등 16개국 참여

○ (거대 신흥시장 개척) ASEAN·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

○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17.9)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

○ (통상역량 강화)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 기대효과

○ 주요 수출시장인 미·중과 경제협력 확대, ASEAN·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 유지

Ⅳ 4대 복합·혁신과제

□ 개 요

○ 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균형·체계적으로 배치

-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복합·혁신과제** 선정·추진

○ △**핵심공약**과 새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복합과제** 중에서 선정

□ 선정과제

①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③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④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추진체계

○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관리

1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과제개요

○ 부채 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사회 불평등 심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대, 내수 확대 및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

○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완성되므로 **성장·고용·복지 정책이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

- **전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특히 **성장정책**(기재부·금융위·산업부 등), **노동정책**(고용부), **복지정책**(복지부) 부처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완성

○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실노동시간 단축** △ **청년·신중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 등을 통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국민 기본소득의 확충과 임금격차를 해소

□ 주요내용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상황판 운영·관리,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사회 정책으로 확대*** 등 범정부적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고용영향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신설 등

② 더 나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더 나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 **공무원 신규 채용**(기재부, 행자부, 인사처)

-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교사·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교육**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 '17년 하반기에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 추진

ⓘⓘ **공공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확충**(복지부)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정규직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고용부)

- **공공기관 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인력 증원 대책 마련
- **일·생활 균형제도 확산,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한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채용 확대
- **상시·지속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
  - (**고용안정**)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 마련
  -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임금수준 공시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병행
-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추진

⇒ '더 나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면밀한 실태 파악을 거쳐, **8월 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 예정

○ **신성장산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병행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등) 확산, **산업·지역 중심 고용정책 추진**(27개 산업별, 시·도별) 등 현장의 일자리 생태계 개선 유도

○ 사회적경제 기업 집중 육성 및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협력·포용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1명 임금전액을 연 2천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관행 개선

○ (신중년) △재직 △전직·재취업 △은퇴단계 취업 지원 등 **인생 3모작 지원**

- (재직)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활성화
- (전직·재취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및 전담컨설턴트 확대, 신중년 폴리텍 지정·운영 등

- (은퇴) 퇴직전문인력·NGO·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 (여성)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및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17년 법제화 추진) 등 경력단절 극복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 직장 내 성차별 완화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④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확대** 및 **가입 지원**

*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단계적용,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 단계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청년·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추진

○ 취업지원 기능 강화, 고용·복지 연계 확대,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및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재직 근로자의 창의력·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훈련 시스템 마련,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등

** 현장·기술변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자격의 신호기능 보호, 산업별로 자격-교육·훈련-경력 간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역량체계 설계

⑤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년) **달성** 지원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범정부적인 지원방안 마련

○ **생활임금제 확대**기반 구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

○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업무 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강화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 **공정임금 구축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 마련

* 적정 납품단가 보장, 원·하청, 노·사 성과공유제 확산 등

⑥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확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 종합적인 **장시간근로 개선방안 마련**

○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

○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 확충 등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

□ **이행목표·계획**

○ **1단계('17년~'18년)** : 일자리 창출 인프라 및 고용안전망 구축

- 일자리위원회·상황판 운영,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실천전략 수립
- 일자리 로드맵(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고용의무비율 조정,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추진, 구직촉진수당 지급,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확대 및 가사·돌봄 서비스 공식화 관련 법제화 추진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 마련,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추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편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방안 마련
- '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보호·지원방안 마련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제도 개선,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도입
- 공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패키지 마련

- 자치단체 생활임금제 확산 추진,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증제도 및 적정임금 지급,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관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 주 52시간 근로 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제도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 **2단계('19년~'20년)** : 공공·민간부문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지속,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블라인드 채용 민간 확산, 가사돌봄 서비스 시행,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 **3단계('21년~'22년)** :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현장 수요에 기반한 훈련체계 구축

□ **입법계획**

○ 고용영향평가 강화 관련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관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차별 없는 여성 일터 조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국회 계류 중)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국회 계류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마련('18년 상반기 국회 제출)

○ 4차 산업혁명형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 비정규직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령(근로기준법 등) 개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 공동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18년 상반기 국회 제출)

○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국회 계류 중),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국회 계류 중)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소득분배·생활방식 등의 변화과정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

○ 과학·기술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

□ 주요내용

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② 과학·기술혁신으로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17년~)

*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 : ('15년) 75% → ('22년 목표) 90%

○ 기초과학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전적 과제 등 **R&D 혁신체계 지원**('17년~)

○ 민간의 기술·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알고리즘,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 개발자·스타트업에게 개방('17년~)

○ **'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평창올림픽과 주요지역(광화문 등)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18년)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서비스*** 육성('18년~)

* (통신) 소형셀, RF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
(융합) 자율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서비스

○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17년)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17년) 등을 통해 IoT 서비스·제품 상용화 촉진

③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사업화·R&D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 추진('17년~)

* 공모창투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 실패 채무조정 및 감면제도 도입 등

○ 5G·IoT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도시 등) 조성으로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가속화('17년~)

○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17년~)

*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등 역량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정부 지원, 협력 이익배분제 운영 등

○ **스마트카, 드론, 3D프린팅, 바이오, AR/VR** 등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 육성 지원

④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진입 지원 및 규제 개선**

-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이 신기술·서비스 테스트 가능)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 새로운 규제체계 확립
- 시장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정부 주도 규제 개선**과 **민간 건의 기반 규제 개선 병행**(O2O 서비스 등) 추진('17년~)

* 신산업 부상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충돌·갈등 조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

○ **지능정보 중심 신규인력 교육** 및 **전직·재취업 지원**(연 9.8만명*) 강화('17년~)

* 청년취업아카데미(1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3.5만), 폴리텍 전문과정(2천), 신산업 창직·창업 지원(3천), 중장년 전직자 재취업 지원(1.5만), 내일배움카드(3만), 소프트웨어부트캠프(2.5천) 등

○ 실직·전직 증가에 대응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체계**(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개선('17년~)

○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 추진 확대('17년~)

* 인공지능 및 ICT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활동(식사, 배변, 이동 등) 보조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 해결

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교육내용·방식 혁신**

○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18년~), **K-MOOC**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적성에 맞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강화('17년~)

○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언어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시간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확충**,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구축**('17년~) 등 추진

-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STEAM 교육과 연계, 논리적 사고 훈련으로 소프트웨어 영재 양성

⑦ 공무원 민간 참여 확대, 인사제도·공공서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한 **민간 공공참여 확대**

○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형·선제형·개방형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추진하는 '**스마트 정부행정**' 시스템 구축

○ 국방·교통·재난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 **ICT를 융합**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회혁신프로젝트** 추진('17년~)

□ 이행목표·계획

○ **1단계('17년~'18년)** : 4차 산업혁명 추진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
- IoT 전용망 구축 완료, 평창 5G 시범서비스 제공 및 개방형 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 ICT 신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술창업자 육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

○ **2단계('19년~'20년)** : 분야별 신산업 육성

- 5G 주파수 공급 및 상용화 실현,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및 지능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 **3단계('21년~'22년)** : 신산업 본격 성과 창출

- 공공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확산('22년까지 누적 총 50종)
- 지능정보 핵심기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90% 달성, 소프트웨어 기술력 강화(최선진국 90%)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

□ 입법계획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17년 하반기 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관계법령 개정('18년 상반기 국회 제출)

3 교육 · 노동 ·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과제개요

○ 초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적 총력 대응 필요

* '16년 출생아 수는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 '17년 출생아 수 36만명대 급락 우려

○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 회복, 자녀 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 주요내용

①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21년까지 단계적 시행),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19년)

  * 지원 대상 : 산후 돌봄 → 산후 돌봄 + 임신~만 2세 방문형 건강관리 개편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17년), 공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18년)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만 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년),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아동투자 확대
-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운영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22년),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18년)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 중위소득 120% 이상 25% 정부 지원, 연 480시간→720시간

②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Hi-Five, 5대 개혁 어젠더)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18년)*

  * 청년고용 노력의무 우선부과 및 의무 이행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로드맵**(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함) 마련('17년)

  *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 해소 포함

ⓘⓘ 주거 공공성 강화

-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한도, 금리 대폭 우대) 신설('18년)

-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2년간 월 최대 10만원) 신설('18년),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17년)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

  * 첫 3개월 소득대체율(40%→80%)·상한액(100만원→150만원) 인상, 첫 3개월 이후 단계적 인상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8년)

  * 단축급여 비율 인상(60%→80%) 및 기간 확대(1년→2년), 전환형 시간선택제(최대 1년, 월 최대 60만원) 확산

- 기업의 출산·양육친화 행태 변화 유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17년)

  * 가족친화기업 지수 기업공시 반영, 우수기업 국민연기금 책임투자, 공공기관평가 가점

- **건강보험**(임신·출산)-**고용보험**(사업장) **정보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확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범위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18년)

  *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 → (개선) 모든 아이 200만원

ⓘⓥ 성평등 문화 정착

- 학교 내 성평등·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22년),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년~)
-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17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18~)고교 및 대학 입시 개선* 등 공교육 혁신

  * (고입)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입시 동시 실시 (대입) 수능 제도 개선 등

-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8년~)

③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 전환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실질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 확대

○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노력, 국가 인구연구기관(예 :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등 신설

○ 인구감소지역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제도 등 마련

□ 이행목표·계획

○ **1단계('17년~'18년)** : 주요대책 시행, 컨트롤타워 강화

- 청년구직수당, 공공임대 확대, 아동수당, 초등완전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 to 4) 등 주요 대책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전담사무국 설치

○ **2단계('19년~'20년)** : 주요대책의 단계적 확대, 성과 창출

- 청년고용의무제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착 등

○ **3단계('21년~'22년)** : 주요 정책목표 달성 및 초저출산 탈피

- 비정규직 등 청년고용대책 지속 보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충 목표 달성, 공보육·유아교육 40% 완성,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개편 완료

□ **입법계획**

ㅇ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국회 계류 중)

ㅇ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부령) 개정('17년 하반기 개정)

ㅇ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국회 제출)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과제개요

○ 지역의 자치권·재원 부족,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균형발전전략 필요

○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체제 구축

○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내실화,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주요내용

①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 중요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역할·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

* 의장 - 대통령, 구성 -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행자부(간사)·기재부장관 등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신규 이양

○ 중앙정부의 법령 제·개정 시 **사무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화**

*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위원회 설치

②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 자치입법권 확대 등 헌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③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 **지역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 조율 기능 강화('17년)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되, 중앙-지방 간 협약제도 시행을 통한 성과 평가 등 책임성도 확보('18년~)

④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 확충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활성화**

-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조례 발의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와 적용 대상 확대
-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등의 **역할·지위 강화**

○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읍면동의 기능·인력**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 개편***

*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본청의 안전·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을 이관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고

○ **스마트 행정혁신**으로 전자적 주민참여 확대*, 취약계층 체계적 보호**

* 주민 공모, 이·통·반장 선출 등 읍·면·동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서명 지원
** 전기·수도·통신 등 사용량의 실시간 확인으로 취약계층 위험상황 사전감지 등

⑥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 구축

-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지원방안 다각화
-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창업 및 정주 공간 등을 제공

○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18년~)

- 혁신클러스터 내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산·학·연 복합지원시설 구축** 및 산·학·연·관 협의회 출범
- **대기업 본사 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혁신 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⑦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 업종 고도화(굴뚝형 → 지식·첨단형)를 넘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주거·보육·문화·복지시설 등 **범부처 산단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위원회 주관 **합동공모방식으로 통합·확대**
-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지식산업센터(제조업·IT·지원시설 입주 복합건물), 주거·편의시설을 연계 설치
- 산단 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산단 내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여 공동R&D, 인력 양성, 취업 연계를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 제조·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산단 내 집중 보급**

○ **테크노파크**의 산학연 공동R&D 및 사업화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스타기업을 육성**

⑧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이전**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조기 착공**('20년 12월 → '20년 6월) 추진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기구·NGO 유치** 지원

□ **이행목표·계획**

○ **1단계('17년~'18년)** : 자치분권 및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

- 제2국무회의는 '17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 후 개헌 시 제도화, 자치분권·기능이양 등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 **2단계('19년~'20년)** :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본격화

- 지방 행·재정 통계 플랫폼 구축, 행정서비스 혁신 자치단체 확산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착공, 국가혁신클러스터 1단계 사업 완료

○ **3단계('21년~'22년)** : 자치분권 및 지역혁신 생태계 정착

- 행정서비스 스마트화 등 고도화 사업 시범실시
- 세종시 신청사 준공, 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15개 조성 완료

□ **입법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 지방이양일괄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 지방자치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및 시행령 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 개정

○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등 개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Ⅴ 지역공약 이행방안

1 지역공약 현황 및 경과

◈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역공약을 보완·발전**시켜 **단계적으로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지역공약을 토대로 이행방안을 강구

○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을 실천해 나갈 것임

□ 문재인정부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

○ 17개 시도 공약 : 130개

○ 시도 간 상생공약 : 13개

□ 공약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지역산업 혁신, SOC(교통·지역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제도 혁신, 기관 설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이행방안**을 **강구**

○ 공약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검토**

* 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면담(6.1),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6.16)

○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TFT**를 **운영**

※ 시도별 지역공약 현황

지역	발전 비전 및 공약
서울	**서울을 안전하고 쾌적한 역사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출발 •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 지하철 급행화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권역별 특화형 도심산업의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동(K-POP 아레나 건설)·상계동을 동북아 신문화중심지로 조성 - 코엑스・잠실 일대를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조성 - 마곡지구를 첨단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 상암 DMC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인천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 남동、부평、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 인천송도를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조성 •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경기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습니다.**
	•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강원	**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생태、경제、평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군 해안경계시설 과학화·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지역	발전 비전 및 공약
	•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 •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 춘천 지역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 지원 •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통행요금 무료화 • 제천-삼척 간 ITX 철도 노선 건설
수도권 상생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 GTX A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대전	**대전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 (구)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창조산업단지 조성 •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 대전교도소 이전 •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충남	**충남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집적지구로 조성 •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지역	발전 비전 및 공약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중부권 중핵경제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 •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
세종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완성 - 국회 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 이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충청권 상생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 논산-계룡-대전 조차장-조치원-청주공항 구간 복선화 •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 청주공항-제천(봉양) 충북선 구간 고속화, 충북-중앙선을 잇는 봉양 삼각선 신설
부산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 해운、항만산업 금융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 영도지구 해양산업 클러스터, 센텀지구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문현지구 금융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 신규 원전 건설 중단、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로 원전 안전성 확보 • 광역상수도 등 상수원 다변화 모색 및 생태관광 조성 •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동남권 ICT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

지역	발전 비전 및 공약
대구	**대구를 지속 가능한 품격 높은 혁신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미래형 자율주행차 R&D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 섬유、안경 등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 (구)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울산	**울산을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성 확보 •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 3D프린팅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 울산 공공병원 건립 지원 •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경북	**경북을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현장 중심 지진·원전안전대책 강화 •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상 급、간식 지원 •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경남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경남 사천、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 • 창원의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지역	발전 비전 및 공약
	•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 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공공선박 발주、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대구 경북 상생	**대구、경북의 위대한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 첨단의료산업의 허브로 육성 •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
영호남 상생	•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전북경북 상생	•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광주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 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전남	**전남을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조성 •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발전 비전 및 공약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 목포 크루즈항 개발, 여수 해양관광 및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 •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전북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 5대 농생명 클러스터 : 익산(식품), 김제(종자, ICT농기계), 정읍(미생물), 새만금(첨단농업) •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 공공선박 발주·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제주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 감귤육성 지원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광주전남상생	**광주전남을 미래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빛과 생명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KEPCO TECH) 설립 • 전남 장성,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전북전남상생	•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 - 전북·전남 6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 담양, 장성) 일대

2 추진 전략

◈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공약 이행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지방 상생발전의 초석 마련

□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로 **시너지 제고**

○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지역 간 양극화 완화 등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토대**로 **공약**을 **실천**

⇒ 관계부처, 지자체, KDI 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및 여건을 정밀 진단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17년 말)

* 혁신도시 시즌2, 산업단지 혁신, 행정중심 복합도시 육성 등

□ 지역과의 **신뢰관계 구축**, **주민 선호와 수요**를 최대한 **반영**

○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공약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력**을 **제고**하여 지속 관리

○ 공약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화

□ **국가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이행** 및 **투자재원 다양화**

○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지역 숙원사업** 등을 우선 검토

○ 공기업 투자, 민간역량 등 국가의 **다양한 자원** 활용

□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연계**하여 추진

○ 국가·지자체 간 역할·재원분담, 사무의 지방 이양 등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맞추어 공약사업도 지자체와 역할 재분담

□ **국가-지자체 간 공동노력 강화**

○ **전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지자체 **재정개혁 추진**

-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사업은 과감한 지출구조개혁 필요

○ **공약사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역량 집중**

○ 국가-지자체 간 **적정 재원 분담**으로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

3 실천 방안

1 추진 체계

□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하여 **상시 관리**

○ 지역공약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 상생 회의'**(가칭) **개최**

○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공약의 실천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현안** 등 **상호 소통**

2 유형별 추진방안

□ **즉시 추진 : 계속사업 및 제도 개선 과제**

① (**계속사업**) 연차별 적정소요 반영

- '18년 예산은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 연차별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지원

② (**제도혁신과제**)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 **신속한 협의**를 거쳐 추진

-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동력 확보**
- 국가 전체 발전 차원에서 필요시 **이해관계 조정**, **공약 보완** 등 **실현 가능**한 **대안**도 **검토**

□ **단계적 추진 :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산업 혁신 과제**

①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KDI, 지자체 등이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

- 지역별 기존 인프라와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점검
- 국가의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의 선호도가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
- 지역 간 형평성 및 시너지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토대로 **단계적 과제 착수**

- 국가전체적으로 시너지가 큰 혁신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혁신 등 우선 추진
-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특화산업 육성 등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숙된 과제의 이행절차를 단계적으로 착수

□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 대형 SOC 등**

○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 투자방향**의 **큰 틀 내**에서 지역의 수요가 높은 SOC에 대해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절차 이행

- 사업내용 구체화, 상위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법령 제·개정 등 필요한 사전절차 추진
- 필요시,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 수정 등 대안 마련도 검토
-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 적극 활용

○ **국가기관 설립**은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성·형평성·중복성 등 점검 필요

- 법령 제·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추진

4 향후 일정

○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제도 개선** 과제 착수(7월~)

○ **즉시추진과제**는 '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8월)

○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12월)

○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추어 지원('18년~)

◈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전국이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이 가능

○ 문재인정부는 지역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지자체도 국가 전체의 틀 안에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시책의 적극 뒷받침을 당부

Ⅵ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1 개 요

□ **계획 수립의 의의**

○ 문재인 정부 **주요공약**과 이를 토대로 한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

- 주요 공약에 대한 추진규모 및 향후일정 등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의 가이드라인 제시**
- ⓘ **단년도 예산편성**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세법개정안** 작성 시 **준거**로 적용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뒷받침**

□ **추진경과**

① (**대상사업 선정**) **선관위 등재 10대 공약, 대규모 재정수반 공약,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약**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주요 공약사업 이외 **공약사업**은 '18년 예산편성과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 최우선 반영

② (**재원추계**) **'18~'22년** 간 공약 추진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액 전액**을, **계속사업**은 **'17년 투자액 대비 증가규모**를 계산하여 소요재원으로 추계
- **공약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제도설계부터 우선 해야 하는 사업**은 **일정재원**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기반 마련

③ (**재원대책**) 강력한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사업 우선순위 전면 조정**, **재정사업 성과평가 반영** 등 **지출구조 개혁**과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 **비과세 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등으로 **국세**·**세외수입 확충** 추진

2 재정투자계획

1 주요공약 지출 소요추계 및 재원대책

◈ ('18~'22년) 5년간 178조원* 지출소요 ⇔ 178조원 재원대책

* 국비지출 151.5조원, 지방 이전재원 26.5조원

□ (**소요추계**) **지출소요**(178조원)에는 **공약 추진소요**(151.5조원)와 **지방 이전재원**(26.5조원)을 포함

○ 공약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감안**하여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 이전재원 규모도 고려**하여 지출소요를 추계

□ (**재원대책**)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세입확충 82.6조원** : (국세) 77.6조원, (세외수입) 5조원

○ **세출절감 95.4조원** : (구조조정) 60.2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 전환) 35.2조원

(조원, 18~'22년 합계)

지 출 소 요	
◇ 합 계(A+B)	178.0
< 국비 지출소요 계(A) >	151.5[1]
① 지출증가	135.1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88.5
-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46.6
② 제도설계 후 추진[2]	16.4
< 교부세·교육교부금(B) >	26.5

재 원 대 책	
◇ 합 계	178.0
① 세입확충	82.6
- 세수확충	77.6
. 초과세수 증대	60.5
. 비과세 정비 등	17.1
- 세외수입 확대	5.0
② 세출절감	95.4
- 지출구조조정	60.2

* 1」 국세 세입증가에 따른 지자체 법정 전출분 26.5조원(내국세의 39.51%) 제외 시 **공약소요**에 **활용 가능한 국고재원 규모**

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지출소요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사업

3」 공약관련 사업 지출 중 '17년 추경안에 약 **4.4조원 이미 반영**(청년구직수당, 치매안심센터 등)

2 투자계획

< 전체 모습 >

1 더불어 잘사는 경제 (+42.3조원)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11.4조원), 4차 산업혁명 및 R&D(9.5), 청년추가고용장려금(2.4), 청년내일채움공제(4.1), 중소기업·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1.9) 등

2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77.4조원)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휴식 있는 삶 등

*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1조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3),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5),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4) 등

3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 도시재생뉴딜 추진,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등

* 도시재생뉴딜(5.8조원, 임대주택 건설분 포함시 11.5조원), 농어업 직불금 및 쌀생산조정제 등(1.1), 혁신클러스터(0.1) 등

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4조원) 병 근무환경 개선 및 북핵 대응에 대한 핵심전략 조기 확보 등

* 병 급여 인상(4.9조원), 북핵 대응전력 조기 전력화(Kill Chain-KAMD, 3.5) 등

※ 제도설계후 추진 및 지방지원 (+42.9조원) 실업급여 강화, 장병 복무기간 단축, 공공형 변호사 등 제도설계후 추진(+16.4조원), 지방이전 재원(+26.5)

[연차별 투자규모]

(조원)

구 분	'17년	'17년 대비 추가소요	
		'18~'22 합계	연평균 소요
[합 계]	**81.2**	**178.0**	**35.6**
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17.4	42.3	8.5
②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3.4	77.4	15.5
③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8	7.0	1.4
④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2.7	8.4	1.7
※ 지방 이전재원 및 제도설계후 추진	5.8	42.9	8.5

1 더불어 잘사는 경제 ⇨ 5년간 약 42.3조원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공공 일자리**)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견인 및 국가 공공서비스 강화

-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4만명** 추가 채용(+8.2조원)

- 사회복지, 보육,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34만개 일자리 계획중 1단계 17만개 확충계획**에 대해 우선 반영(+3.2조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치매안심센터 설립, 보육·대체교사 증원 등 다른 공약사업에 반영된 소요 2.8조원 포함 시 약 6조원 수준

○ (**맞춤형 일자리**) 청년 등 계층에 맞는 일자리 제공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 임금**을 **3년간 지원**(+2.4조원), 청년층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지급**(+1.3조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4.1조원), 고령화 대비 **노인일자리 물량·단가 대폭 확대**('22년까지 80만개, 22→ 40만원)

  *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본인적립 300만원

② 미래대비 투자 강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미래투자**)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초연구**(투자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R&D 적극 지원**(+9.5조원)

○ (**중기·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모태펀드 적기 공급** 및 **창업지원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1.9조원)

  *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충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등

ㅗ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5년간 약 77.4조원

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교육 및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보육·교육**)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 **0~5세 아동**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10.3조원) 및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5조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1.0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 (**복지강화**) 맞춤형 사회보장, 품위있는 노후생활 및 국민 건강증진, 서민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국가 실현**

- **생계·의료·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8조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10만원 인상**(+23.1조원)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립,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국민 건강증진 및 장애인 자활 적극 뒷받침(+1.8조원)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적임대 17만호 적기공급**(+15조원)* 및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강화**(+4.4조원)

* 공공임대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연 4만호),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5만실 등 포함

② 안심사회 및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 (**안전투자**) **국민안전 강화 및 미세먼지 사전예방 추진**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1.2조원)
- 탈원전시대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확대('30년까지 20%) 등 여건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1.6조원)

○ (**삶의 여유**) 휴식 있는 삶 구현 및 문화생활 향유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및 상한 확대, 저소득층 문화 누리카드 한도액 10만원**으로 **인상**(+0.2조원), **공공 스포츠시설 확충**(+0.1조원) 등

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5년간 약 15.4조원

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및 도시재생뉴딜 사업 적극 추진

○ (**농산어촌**) **농산물 수급 및 농어민 생활안정 뒷받침**

-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2년간 한시 추진 및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확대** 추진(+0.4조원)

- **밭·수산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년 5만원/ha) 및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지원(+0.4조원), 농업 **재해·안전보험** 강화(+0.1조원)

  * 예) 소득 수준 등을 감안,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

○ (**도시재생**) 맞춤형 도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매년 약 2조원 수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패키지**로 추진(매년 100곳 이상)하여 노후 구도심 재생 및 서민 생활 여건 개선(+5.8조원)*

  * 임대주택건설(공적임대 17만호와 도시재생뉴딜 동시에 속한 물량) 포함시 소요 +11.5조원

- 혁신도시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할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0.1조원)

② 병영생활 여건 개선 및 북핵 대응 핵심전력 투자 강화

○ (**병 급여**) **병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22년까지 '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4.9조원)

- 급여 인상에 따른 효과적인 **급여관리 제도개선 병행** 추진(급여의 일부 적립 후 제대 시 지원 등)

○ (**방위력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구축, 체계적인 **전작권 환수 준비** 등과 관련한 **직접 소요** 중점 투자(+3.5조원)

  * Kill Chain-KAMD 조기 전력화, 군 전술 지휘통신 체계사업 등

3 재원조달계획

< 전체 모습 >

◇ **(총규모) 178조원 : [세입확충 82.6조원] + [세출절감 95.4조원]**

/ **(세입확충)**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총 82.6조원** 확보

○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등 **국세수입 77.6조원** 마련

○ 과징금 수입 확대, 연체·불납액 해소 등 **5조원**의 **세외수입** 확충

(조원)

구분	'18~'22 합계	연평균 수입	비고
[세입 확충]	**82.6**	**16.5**	
◇ 국세수입	**77.6**	**15.5**	
○ 세수 자연증가분	60.5	12.1	
○ 비과세·감면 정비 등	11.4	2.3	
○ 탈루세금 강화	5.7	1.1	비과세 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등
◇ 세외수입	**5.0**	**1.0**	

2 **(세출절감)** 지출 제로베이스 검토 및 사업 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으로 **총 95.4조원** 마련

○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0% 수준 구조조정 추진**하고, **의무지출**은 **전달체계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절감(60.2조원)

○ 여유자금이 많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공약이 많은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자금 최대한 활용 등**(35.2조원)

(조원)

구분	'18~'22 합계	연평균 수입	비고
[세출 절감]	**95.4**	**19.1**	
◇ 재정지출 절감	60.2	12.0	의무/재량지출 구조조정
◇ 여유자금 활용 등	35.2	7.1	여유자금 활용,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등

1 세입확충계획

◈ (**국세 수입**) 최근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 **대기업**·**고소득**·**고액재산**의 **세부담 적정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세입확충

*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

◈ (**세외수입**)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연체**·**불납결손액 해소 등 적극 추진**

1 국세수입 확충 ⇨ 5년간 약 77.6조원

① 최근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전망치 반영** : 약 60.5조원

② **비과세**·**감면 정비 등** : 약 11.4조원

-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거나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및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원칙적으로 폐지**·**축소**
-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대리납부제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확대**
-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과세형평** 및 **과세제도 간 정합성**을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⑤ **탈루소득 과세 강화** : 약 5.7조원

-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현행 : 계좌잔액 10억원 초과)을 **확대**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강화**
- 법인세의 사전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 엔티스(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 확대**를 통해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 안내자료 제공**

ㅇ **세외수입 확충** ⇨ **5년간 약 5조원**

○ (**과징금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 상향**(공정거래법 개정안 계류중), **임의체납 축소** 노력 등을 통해 과징금 수입 확대

○ (**연체·불납결손액 해소 등**) **전문기간 활용 등을 통한 징수노력 강화**, 채권관리 전산화·일원화된 조회납부 포털 구축 등으로 연체·불납결손액 완화

2 지출 절감 방안

◈ (**지출 구조조정**)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0% 수준 구조조정**, **의무지출**은 **전달체계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절감

◈ (**기타**) 주택도시, 전력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 적극 활용** 및 융자사업 **이차보전 방식 전환** 등

1 재정지출 절감 ⇨ 5년간 약 60.2조원

○ (**의무지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연계 확대***로 부정 수급 차단,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 등 **복지지출 누수 방지**를 통해 달성

* ('13) 42개 기관 452종 → ('17) 62개 기관 804종

○ (**재량지출**) 분야별 **지출 성격** 감안, **절감률**을 **차등 적용**

* 예) SOC·산업·R&D → △7% 이상, 복지·교육 등 → △5% 이상, 일반행정 → △3% 이상

ㅇ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이차보전** ⇨ **5년간 약 35.2조원**

○ (**여유자금 활용**) 기금 내 **여유자금이 풍부**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공약 사업이 많은 주택도시·고용보험 등의 여유자금 활용 확대**

○ (**이차보전 전환**) 융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시, **현장에서 대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 추진

4 향후 추진일정

◈ **즉시 추진과제**와 **내년 이후 단계별 추진과제**로 나누어 후속조치

/ (**즉시추진**) ’17년 ‘일자리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구직촉진수당**, **치매안심센터** 등은 **국회 통과 후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

* 자체 기금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반기 중 시행하여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착수

2 (**’18년이후 추진**) ’18년 **정부예산안 편성**, ’17년~’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8년 **세법 개정안**에 최우선 반영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 확보

○ **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보다 공고화

3 (**제도설계 후 추진**)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토론회**,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

* 국회 입법 등과 연계된 과제는 대국회 활동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우호적인 환경 조성

Ⅶ 입법 추진계획

□ 의의와 필요성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5년간의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주관 부처의 입법노력 경주** 및 **점검·평가**에 활용

□ 추진방향

○ **정부 초기 입법역량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 조기 구축**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연내 개정 완료** 추진

-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일자리 대책 및 지방분권 등 **복합·혁신과제 관련 법률안**의 경우 **'18년까지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 입법 추진

*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추후 집행상 이견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합의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당·정 간 협의를 바탕으로 의원발의로도 추진

○ 정부 내 입법절차 및 국회 심의과정 등 **입법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진행상황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점검·평가**

□ 100대 국정과제 입법 필요사항 분석

○ **입법조치 필요 국정과제**

-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 과제**(66%)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필요

* 실천과제 321개 중 법률 제·개정 과제는 279개, 하위법령 제·개정 과제는 42개

○ **제·개정 필요 법령안 및 입법 추진계획**

- 총 **647건 법령**(법률 465건, 대통령령 111건, 총리령·부령 32건, 행정규칙 39건) 개정 필요

- **법률 465건 중** 기제출(123건), '17년(117건), '18년(187건) 등 **427건**(92%)을 **'18년까지 제출 완료**

- **하위법령 182건 중 108건**(59%) **연내 정비 완료** 계획

제·개정 필요 법령안	법 률						하위법령			
	소 계	계류 중	제출 계획	제출 시기			소계	정비 완료 기간		
				'17년	'18년	'19년 이후		'17.9월	'17.12월	'18.6월
647	465	123	342	117	187	38	182	37	71	74

○ **5대 국정목표별 주요 법률안**(예시)

국정목표 (제·개정 필요 법률/하위법령/소계)	주요 법률안	추진내용
국민이 주인인 정부 (86/28/114)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가칭)사회혁신기본법	•사회혁신기금 및 재단 설치 근거 마련
더불어 잘사는 경제 (124/50/17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공기관 :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17년 3% → '18~'20년 5%) •민간기업 : 청년고용 창출 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가칭)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 •대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이행력 확보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173/85/258)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18년 25만원, '21년 30만원)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
	(가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살생물 승인제 및 살생물 처리제품 허가제 도입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1주 52시간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4/15/7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가칭)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장기 농정방향 수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4/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의 규모를 50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목표연도 조정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한 합참 임무, 역할 정립
	(가칭)동아시아 다자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지속 추진 위한 기본원칙 정립, 관련 업무 총괄·조정 기능 담당 조직 설치

□ 국정과제 입법계획 관리체계

[정부 내 : 입법절차 효율화] **[국회 심의 : 국회와의 협력 강화]**

하위법령 개정	▸ **주요 국정과제별 일괄 정비** ▸ **2017년 내 정비(108/182)**

법률 제·개정안 마련	▸ **'국정과제 입법계획'-'연도별 입법계획' 연계·관리**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마련·국회 통지('17. 7.) ▸ **국회 제출 일정 관리**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등 핵심 법안의 사전입안 지원 강화 *신속 입법지원 절차 운영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갈등관리 ▸ **2018년까지 국회 제출 완료 및 통과 추진(427/465)**	➡	**국회통과 지원**	▸ **당·정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중점 법안' 선정·관리 -5당 공통공약 관련 법안 우선 처리 지원 ▸ **대국회 협의 정부 내 단일 창구 마련**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통일된 정부의견 제시

〈 입법추진 상황의 주기적 점검, 평가·보고 〉

○ **국정과제 조기 완수**를 위한 **입법지원·관리 강화**

- **하위법령 제·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108/182)하여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 지정** 전 과정 신속한 입법 지원

○ **정부 내 단일 창구**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

- 당·정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한 정부내 단일 창구 마련
- 국정과제 이행법안은 **매 회기별 중점법안으로 선정**,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 지원

  * 특히,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

○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의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법제처 및 총리실 주도 **입법 추진상황 주기적**(분기 1회) **점검·관리**

  * 주요과제는 단계별 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지연 사유에 따른 입법 지원 제공
- 국회 제출 일정, 제·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

Ⅷ 후속조치 계획

1 국정과제 및 복합·혁신과제 추진체계

1 100대 국정과제

□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설치(대통령령 제정)

○ **100대 국정과제 점검·보완·평가** 및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총괄**(국정목표를 고려하여 **4~5개**의 **분과***로 구성)

* △ 정치·행정·외교 △ 경제 1·2 △ 사회 1·2

○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정책기획비서관)이 **총괄·운영**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체계

□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관리

①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일자리위원회***(신설)

* 위원장 - 대통령, 부위원장 - 민간, 간사 - 일자리수석

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4차 산업혁명위원회***(신설)

* 위원장 - 민간, 부위원장 - 미래부장관·정책실장, 간사 - 과학기술보좌관

③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기존)

* 위원장 - 대통령, 간사 - 복지부장관

④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신설)

* 위원장 - 국무총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과제 추진

2 국정과제 관리 방안

□ 국정과제 관리

○ (**관리 방향**)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 성과 창출 지원

- (입법) **국정과제 입법 추진계획** 점검(국회 회기별) 및 당정 협의
- (예산) 국정과제 **예산 우선 지원 및 조기 집행**
- (조정)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견 등 **장애요인의 선제적 해결**

○ (**복합과제**) **복합·혁신 과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국무조정실이 **현장 점검 및 쟁점 조정·지원**

* △ 일자리 △ 4차 산업혁명 △ 인구절벽 해소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 추진상황 점검

○ (**정기점검**) △ **추진실적 정책기획위** 보고·논의 △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 (**수시점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심층점검** 실시, **현장**의 **문제·애로사항 발굴**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한 **신속한 해결** 지원

□ 평 가

○ (**기본방향**) **국정과제 이행성과 중심**으로 부처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정책추진 노력**,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국민만족도** 등

*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가감점으로 반영

3 국정과제 공유·확산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구현된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 **국정과제**를 **전 부처·공직사회 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 추진

□ 국정과제 전 행정기관 공유

○ 국정비전·목표를 담은 액자(디자인)를 제작, 행정기관에 배포(행자부)

□ 당·정·청 국정철학·국정과제 공감대 확산

○ 당·청, 각 부처 참여 **당·정·청 워크숍** 조속 개최

○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숍** 개최(3회)

□ 전 지방자치단체 국정철학·과제 확산

○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전파·확산(행자부 주관)

○ 필요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등 추진

□ 각급 교육훈련기관 활용, 전파·확산

○ 국정과제 관련, 단기과정 신설·운영

○ 운영 중인 장기과정은 교과목 반영 및 세미나 등 주제 활용

* 공무원 대상,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을 담은 '업무참고용 핸드북' 제작

□ 국민 대상 맞춤형 설명

○ 국민 대상, 전자출판, 만화·카툰 제작 게시(전자책 등)

첨 부 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1	**(오-45/노계향)**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 감독 및 그 현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열린정부)
2	**(온-5013/기린)** 각 공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재무재표와 결과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성과급제도 전반을 개선**해 주세요.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3	**(온-4742/복권판매인)** 사회취약계층인 복권판매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로또 인터넷 판매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4	**(오-159/김주연) 블로그마켓, SNS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세형평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과세형평 제고)
5	**(오-6/전희복)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기관별 중복정책을 일원화**해 주시고, 특히 **카드수수료를 꼭 인하**해 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온-509/민서아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확실한 limit**를 정해서 기업이 경영실패가 아니라 공매도로 인해 망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7	**(오-31/김인영)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8	**(오-82/정승호)** 우리 **문화·역사 관련 자료를 한글 및 영문으로 DB**화해서 외국인 등이 우리 문화·역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ICT와 공공·민간 산업·서비스의 전면적 융합)
9	**(온-7056/뚜벅이메이커)**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학교교육도 변해야 하기에 각급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메이커교육 전담 교사 양성** 등을 제도화하는 **메이커교육 촉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경2-8)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제고(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추진)
10	**(온-7350/달이떠오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SW·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11	**(온-8876/하랑)** 탁월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과 이들의 재능과 기술을 원하는 이들이 손쉽게 연결되는 **일자리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주세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혁신창업 활성화)
12	**(온-3487/이르스기)**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불필요한 인증으로 **비효율을 양산하는 액티브X를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규제 개선)
13	**(온-3506/kist92) R&D는 경제성(B/C)이 아닌, 기술성 평가로 전환**하고, 정부지원 **타당성(공익성)만 평가하는 것으로 예타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역할 강화)
14	**(온-4408/바람의아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국민 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하게 추진**해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지역사회 기반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
15	**(온-4605/천공태자)** 장애인 학습, 생활 관련 필요한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해 주세요.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
16	**(온-6355/돈먹는송아지) CCTV 설치 등 비무장 지대를 완전히 첨단화** 하고, 군인들도 첨단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킵시다.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ICT와 공공·민간 산업·서비스의 전면적 융합)
17	**(온-8114/kjmin5)** 정부 연구개발비 인건비 계상 등 **연구개발비 전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R&D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18	**(온-2691/늘푸른당)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지원 및 전국 농산물 총량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곡물자급률을 제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19	**(온-2691/늘푸른당)**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저가 곡물 수입 등으로 우리 농업이 빈사상태니 **농산물 수급 안정정책을 강화**해 주세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20	**(온-2737/comet)** 확진농가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거리·권역을 고려한 그 외 농가는 예찰 강화로 **AI 방역 및 관리 체계를 개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21	**(온-2764/이재철) 범정부차원의 깨끗한 농촌, 산촌, 어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주세요.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살고 싶은 농산어촌 공간 조성)
22	**(온-2783/ipowerpac) 현행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 보완**, 수입 사료의 엄격한 관리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선진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3	**(온-2784/아름다운세상) 귀농귀촌 전반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귀농귀촌을 활성화 해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24	**(온-5014/김경희) 반려동물의 가정분양은 정식 브리더에 한해서 지정**하고, 일반분양은 정식 센터(유기동물 센터 등)를 통해서만 했으면 합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25	**(온-5228/SOYOON)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반려동물들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26	**(온-8552/어르신) 우리 전통 발효식품 퓨전화 등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음식한류 및 경제성장 선도하도록 추진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27	**(온-9456/ipowerpac)** 장기 보관으로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정부양곡을 공업용 전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세요.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쌀 수급 안정)
28	**(오-24/엄대유)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발전·산업부문 배출량 획기적 감축)
29	**(오-31/김인영)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30	**(온-3327/lllilllll1)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천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31	**(온-3390/ecolady)** 에너지 절약 홍보시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 **국민인식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제고**해 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32	**(온-3495/DK)** R&D 관련 **기업에서 지출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에서도 지원(역매칭)**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R&D를 적극 지원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33	**(온-3517/선임연구원)** 일반행정예산과 달리 세세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연구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해 선집행 후 검증 및 확인 체계로 선진화 추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R&D 관리규정 및 시스템 일원화·간소화)
34	**(온-8393/두아들맘!)**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35	**(온-8448/알렉스정)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Plant 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 확충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36	**(온-8515/안전한대한민국)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 강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37	**(온-8559/jsong)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풍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38	**(온-9204/윤태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재양성, 투자 확대, 시민 참여의 의무화** 등 추진해 주세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39	**(온-445/토토맘)** 물건 값 외에 별도의 배달료를 지불하는 문화의 제도화 등을 통해 **택배비 등 화물배달비용을 현실화** 해주세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40	**(온-93/구상)** 자본금 요건의 폐지 등 허가기준을 완화로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조속통과**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41	**(온-812/그러게말이오) 화물차 지입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경제민주화**, 민생 안정, 적폐청산 등을 이행해 주세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제고(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42	**(온-5428/정론직필)** 지하철 객차번호 인지 용이하게, 순찰인원 2배 증원, **신고번호 전화 시 실시간 위치 전송 등으로 지하철 안전 강화**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노후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43	**(온-8718/backpacker) 항공분야 의무 종사인원 증원 등을 통해 일자리는 확충**하고 국민안전은 강화해 주세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4대 교통사고 줄이기)
44	**(오-5/오주현) 언론이 오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경우 벌점제 등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
45	**(오-58/조기영) 물 절약 설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 계획 수립·시행으로 농업진흥,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46	**(오-545/황병봉)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및 활용**으로 효율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47	**(온-8678/위드케이) 학교 복도 '스마트 수직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구축·보급을 추진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48	**(온-2691/늘푸른당)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지원 및 전국 농산물 총량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곡물자급률을 제고**해 주세요.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49	**(온-3495/DK)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및 활성화**로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기술개발 효과 거양 필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50	**(온-7350/달이떠오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51	**(온-8743/슈퍼에디슨)**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받았는데, 관련종사 **경력 5년 미해당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 제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혁신창업 활성화)
52	**(오-5/오주현) 언론의 부정적 기능과 그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세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미디어 육성진흥)
53	**(오-24/엄대유)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원인규명 및 예보 정확도 제고 등 5개 과제)
54	**(오-58/조기영) 현재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일원화해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55	**(오-545/황병봉)** 미세먼지, 오존층파괴 및 온난화 주범인 **염소계 또는 불소계 온실가스인 냉매 감축방안을 제도화** 해주세요.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온실가스 감축 강화)
56	**(온-5463/대나무헬리콥터)** 현재 **층간소음지원** 사이트인 '이웃사이센터'는 효과 없으니, 피해 **입증지원 제도화 등 효율적 지원제도 운영**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57	**(온-2408/왕사과)**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 공단 인근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필터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58	**(온-5513/카레라)** 저수조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 수도시설전용 세척・소독제의 규격기준(안) 마련, 수도시설전용 세척・소독제에 대한 검증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 주세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59	**(온-5553/인성)**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는 초미세먼지 기준은 너무 미흡하니 **WTO 기준에 의거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주세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60	**(온-5807/Bakmi29n) 염산, 황산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 구입,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생활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61	**(온-6104/날숨) 남북 야생동물이 교류할 수 있는 남북간 생태통로 개설**을 통해, 남북평화, 관광활성화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62	**(온-3327/lllilllll1)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천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63	**(온-4315/Ziin)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해서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 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64	**(오-63/손근택) 연금보험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지급 개선**, 도시 지하층 거주자 복지지원 등 서민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65	**(오-112/김임용)** 파킨슨증후군 등 각종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 신설 및 국가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의료공공성 강화)
66	**(오-322/이수현)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방안(인식개선, 교육강화, 소통시스템 구축 등)** 마련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67	**(오-430/임성권)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룸 등) 중도 퇴소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68	**(오-565/신지연)** 아동학대 근절 위해 **보육기관 평가를 학부모(어린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69	**(온-3836/한우리) 인턴, 레지던트에게도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정상적인 근로** 상태에서 환자를 돌 볼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70	**(온-4450/이한규) 아동그룹홈의 예산편성(정부예산이 아닌 복지기금) 등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운영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71	**(온-4476/한소리) 아동그룹홈의 타아동양육시설 양육비전액지원 등 대비 다양한 내용의 차별**적지원이나 비지원을 개선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72	**(온-2647/하늘과) 농어촌 보육시설 국공립화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등 지역아동복지를 개선해 주세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73	**(온-8511/성빈의삶)** 연령주의로 인해 '노인' 일자리나 '고령자' 일자리는 경비나 청소 같은 단순노무직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 **고령자들도 좋은 일자리, 자아성취 등 할 수 있도록 지원**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74	**(온-8906/로제) 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원) 활성화와 지원 확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인복지도 강화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 일자리 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5	**(온-4315/Ziin)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개선**해서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 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도록 개선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76	**(온-4408/바람의아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국민 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히 추진**해주세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77	**(온-5401/시너지)** 매년 단순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는 최대 5만명입니다. **환자안전법 보완, 관련 R&D 강화** 등 요청합니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78	**(온-9170/장복산)** 주차관리 및 하천·공원 청소업무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게 공급**해 주세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79	**(온-9187/굿가이수니)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에 환원되고 자립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니어멘토단을 만들어 지원·운영**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노인 일자리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80	**(온-9026/괜찮니)** 국민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해주세요.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실천과제)
81	**(오-342/최기동) 불법 국제결혼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다양한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82	**(오-6/전희복)**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기관별 중복정책을 일원화 하고, **주민주도의 지역거점상권을 통합육성해주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83	**(오-45/노계향)** 국가의 세입 세출 등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 감독 및 그 현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84	**(오-273/권율)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자 실태조사 시 직접 조사**를 실시해 주세요.(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고용자를 통하지 않고)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비정규직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85	**(오-193/변소영)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
86	**(온-2624/하리얌)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관련 제보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87	**(오-517/신미향)**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각종 해외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88	**(온-1980/영현아빠) 결혼이민자에 대해 한국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89	**(온-6036/모카매니아)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조직화 등이 필요합니다.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문제 해결(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90	**(온-6096/Dengel) 군납비리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국방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	방산비리 척별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91	**(온-6423/sksnrnrp12)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폭행 범죄, 인종간 혐오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엄정대처**해서 국민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범죄예방을 위한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재범방지(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92	**(온-6423/sksnrnrp12) 이민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추진**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93	**(온-6524/가을탱이)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이전, 피해자와의 접촉점 제한 등 개선해 주세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94	**(온-6730/내코가석잔데나라걱정) 초중고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의식, 권리의식 등 제고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95	**(오-11/김병일)**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 내 행정위원회 참여위원의 50%이상을 민간인**으로 해 투명성, 신뢰성 확보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혁신적인 열린 정부)
96	**(오-193/변소영)** 최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97	**(오-461/김용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 제도 마련**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98	**(온-1942/미토스) 국정 상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진행상황,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주세요.	열린 혁신, 서비스하는 행정(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99	**(온-6122/헌법1조)** 방위사업 비리척결 등 해당분야 적폐청산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군인 중심에서 민간인으로 대폭 교체**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문민화 적극 추진)